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March vol. 111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미래국가 설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March

vol. 111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국가 재정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투자입니다.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기후·산업혁신 등
국가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방향과 아이디어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장기전략
위원회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4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양보
MON

04

재정 칼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의의

-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의

논의와 주안점

-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1월 기준 재정동향

16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2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4

재정캘린더



04



54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56
재정정보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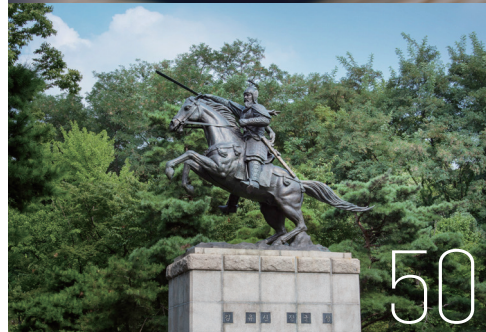
58
애독자 코너

36
재정 제도 이야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경제학

42
재정이 MONEY
재정이 가리키는 산업의 미래

46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호조판서와 평안감사

50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명장 김유신, 삼국통일을 가능케 한
군사·물류·재정의 전략적 운용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의의

미래사회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적 정책 플랫폼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간사)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공공투자 재원



정책의 시계를 넓히다,
장기 전략
거버넌스로의 전환



AI·반도체·바이오,
미래 산업 로드맵을
설계하다



민관 협력으로
미래를 논의하는
국가 정책 플랫폼



최근 한국경제는 기술 혁신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등 다양한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재정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시계를 보다 길게 설정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 기술혁신, 인구구조 전환, 기후 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

장기 전략의 필요성

최근 정책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산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 정책 역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전략은 단순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가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출범 이후의 발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전환 등 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기수를 거치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논의해 왔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연혁

- 1기(2012~2013) : 위원회 출범 및 국가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시작
- 2~3기(2014~2017) :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산업 전략 등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 4~5기(2018~2023) :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사회구조 변화 등 미래 정책 과제 논의 확대
- 6~7기(2023~현재) : 산업·기술 변화와 인구·기후 등 복합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사회 전략 논의

이와 같이 위원회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정책 의제를 확장하며 장기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다.

최근 위원회 활동과 정책 논의

최근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 논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이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분과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 전략

중장기 전략 논의에서 핵심 축은 여전히 혁신 성장이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단순한 성장동력 확보를 넘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빠른 추격(catch-up)을 통해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둔화와 산업 역동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산업 경쟁의 본질은 모방과 효율이 아니라 설계와 창조, 그리고 선도적 규칙 설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는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만으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투자 확대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에 있다. 과거의 성장 모델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 위에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유리했지만, 도전과 창조를 요구하는 선도형 경제에는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리·통제 중심의 제도에서 창의·도전 중심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

확한 로드맵 수립이다.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전환, 콘텐츠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생태계-규제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둘째, 장기적 시각에서의 지속적인 R&D 투자이다. 선도형 기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는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 모두 긴 호흡의 투자 구조를 구축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공 R&D는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민간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혁신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다. 인재, 자본, 기업, 연구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된 개방형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분절된 구조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산업 확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혁신성장은 단순한 정책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이다. “1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지킬 수는 없다”는 지적처럼, 이미 확보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장 공식은 쉽게 무력화되며,昨天的 1등이 오늘 흔들리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결국 혁신성장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키워내는 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있으며, 이는 중장기 전략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의 시계를 넓히는 거버넌스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책의 시간축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변화, 인구구조 전환,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모두 장기 과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접근을 넘어서는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책 및 제도 환경은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 최적화되어 왔으나,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와 단기 성과 중심 체계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기술 전환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형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도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사·평가·규제·노동 등 정책 환경 전반을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규제 혁신,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 설정과 결단이 가능한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정책의 시계를 넓히고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한 장기적 논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미래 사회 전략을 모색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의 논의와 주안점

교육·신뢰·청년, 미래를 여는 세 가지 열쇠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장)



교육제도 개혁,
암기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전환하다



신뢰 부족이 만드는
약순환, 사회 시스템
전반의 과제



인구 감소·AI 확산,
청년 세대의
하강이동을 막아라



교육·신뢰·청년,
미래 한국 사회를 여는
세 가지 열쇠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5~10년을 내다 보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세 개의 분과(미래사회전략반, 혁신성장반, 거버넌스개혁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사회전략반은 교육, 기후, 사회 복지, 청년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26년 1분기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만성적 위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이면에 놓인 교육제도의 경직성, 평가·선발 체계의 신뢰 부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분과회의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을 교육제도 개혁, 사회적 신뢰 구축, 인구·청년 문제의 세 축으로 정리하고, 미래사회전략반이 향후 중심으로 논의할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제도 개혁

미래사회전략반의 분과회의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위원들은 현행 교육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지식 전달 중심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입시, 대학 교육, 취업 과정 전반에 걸쳐 연쇄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능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일회성·단답형 평가체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분과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사교육 시장의 선제적

반응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수능의 역할을 자격고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이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상과 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상 사이에 괴리가 있고, 교육 과정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지식의 암기와 재현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 사회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정 분야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이른바 '덕후'형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국의 교육 체계는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시되었다.

사회적 신뢰 구축

교육제도 논의의 이면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된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용, R&D 평가, 인사 관리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비효율과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앞서 논의한 교육제도 개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획일화된 학생선발 방식의 극복인데, 정성

평가의 활용은 이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강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표준화 테스트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선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평가자에 대한 신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이는 결국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객관화된 정량평가에 의존하게 만든다. 추천서(레퍼런스) 문화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교수가 작성하는 추천서가 거의 예외 없이 긍정적으로만 작성되어 변별력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지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R&D 평가에서도 평가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평가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인한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청년 문제- 인구변동과 AI 확산

미래사회전략반의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청년 일자리 부족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교육 투자 대비 낮은 보상,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특히

인구변화와 AI 확산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변화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엄격한 입시 선발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대학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은 표준화 테스트에 기반한 대학입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교육 자원의 배분과 대학의 역할 재정립 논의와도 직결된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청년 세대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의 대체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현재 교육 시스템이 길러주는 역량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세대보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하강이동"을 우려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인구 감소는 교육 시스템의 재편을 요구하고, AI 확산은 청년 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의 하강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고용-복지를 잇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래사회분과의 향후 작업계획

미래사회전략반은 1분기 자유토론을 통해 교육제도 개혁, 사회적 신뢰 구축, 인구변동과 청년 문제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도출하였다. 2분기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체계의



개편 방향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의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수능의 역할 재정립, 대학의 선발 자율성 확대, 서·논술형 평가로의 전환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경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과 추천서 문화의 개선, 채용 및 R&D 평가 제도의 합리화 등을 다룰 것이다. 공정성의 확보와 평가의 전문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과제인 만큼,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와의 연계 논의도 모색할 계획이다. 인구변동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시스템 재편 방향과 AI 확산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고용-복지를 잇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할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하강이동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미래사회전략반은 이러한 심층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미래사회전략의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의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미래 위기는 개별 정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신뢰·인구라는 세 축이 상호 연결된 구조적 과제이다. 이번 중장기전략이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촉발하고,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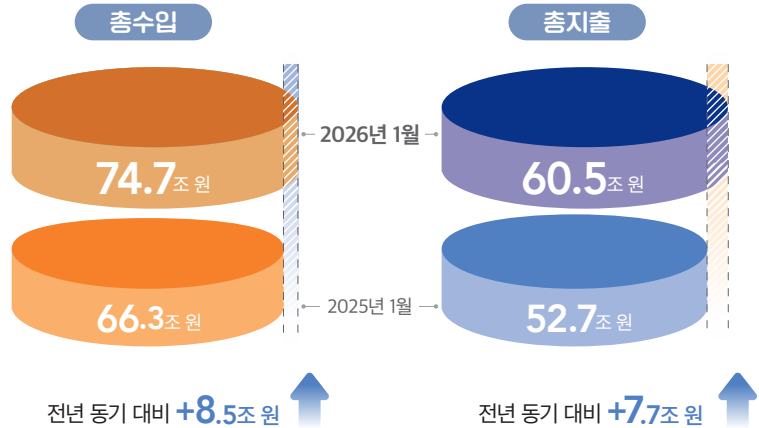
나가며

분과회의에서의 논의를 돌아보면, 위원들의 문제의식이 수렴하는 지점은 결국 ‘사람’이었다. AI와 바이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기술과 산업의 혁신 못지않게 사람을 키우고 평가하는 방식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 미래사회전략반이 공유한 핵심 인식이다. 이 글에서 다룬 과제들은 하나같이 오랜 관행과 사회적 합의가 얽힌 난제들이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은 당장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여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7기 중장기전략이 그러한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정동향

2026년 1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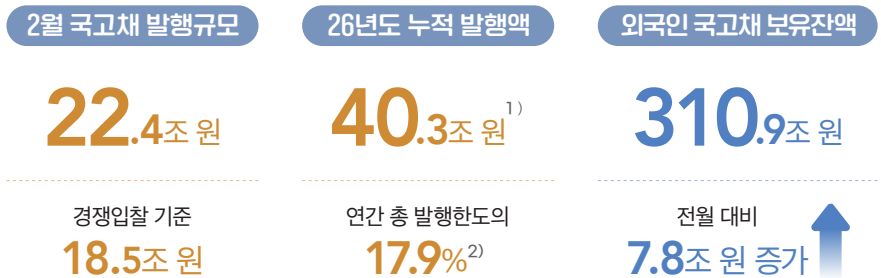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3.

재정수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주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주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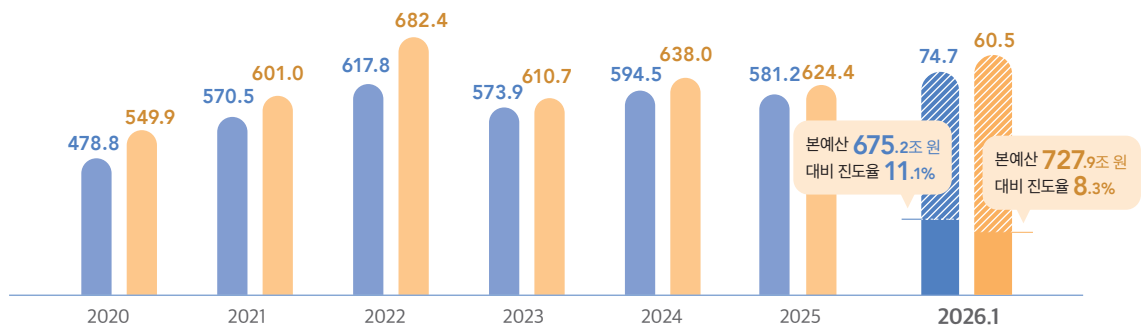
국고채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0.3조 원 포함시 40.6조 원
 주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 한도액 225.7조 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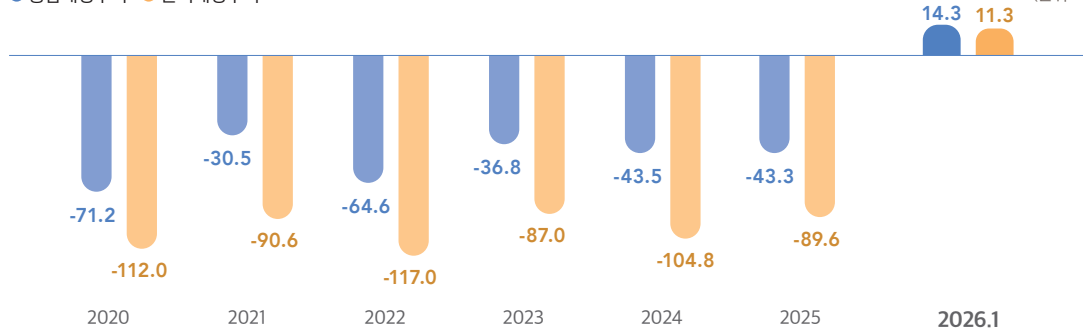
●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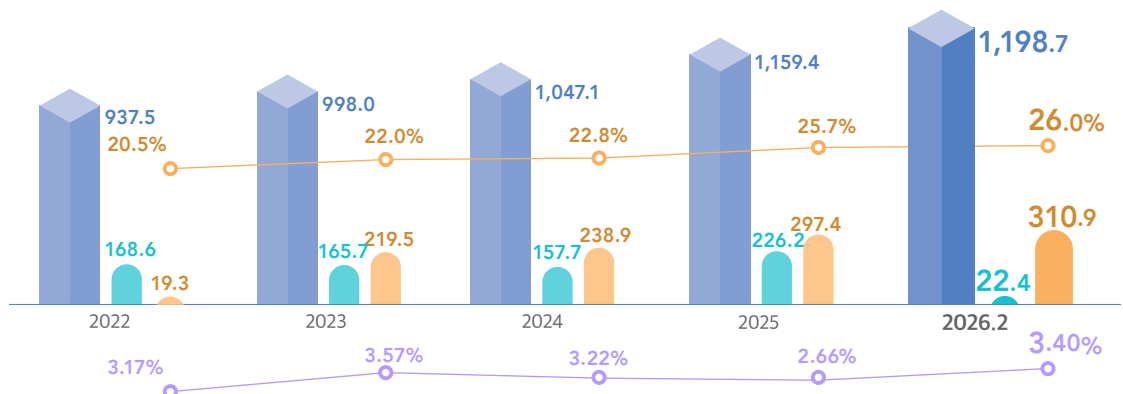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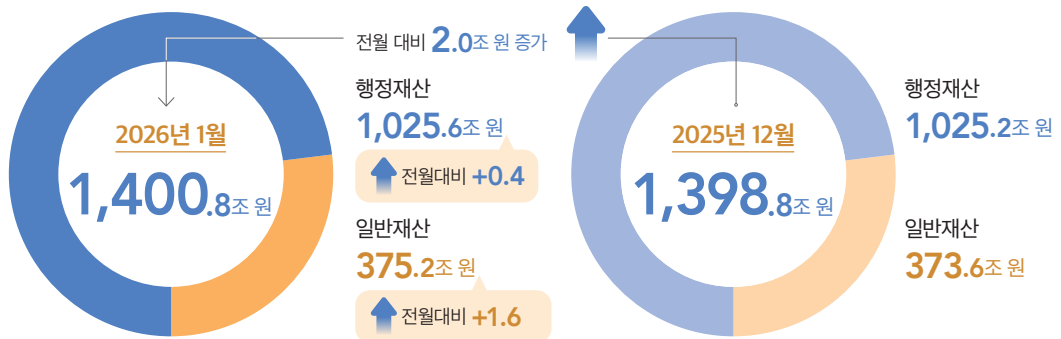
● 발행잔액 ● 발행액 ● 외국인 국고채보유 ● 평균조달금리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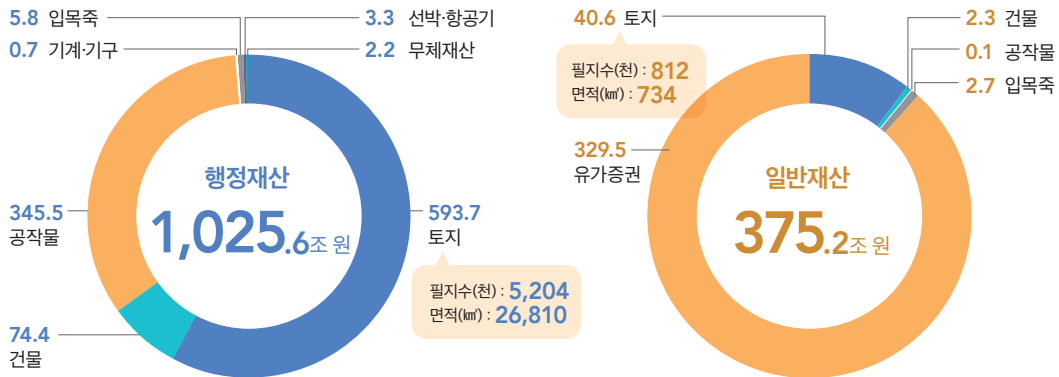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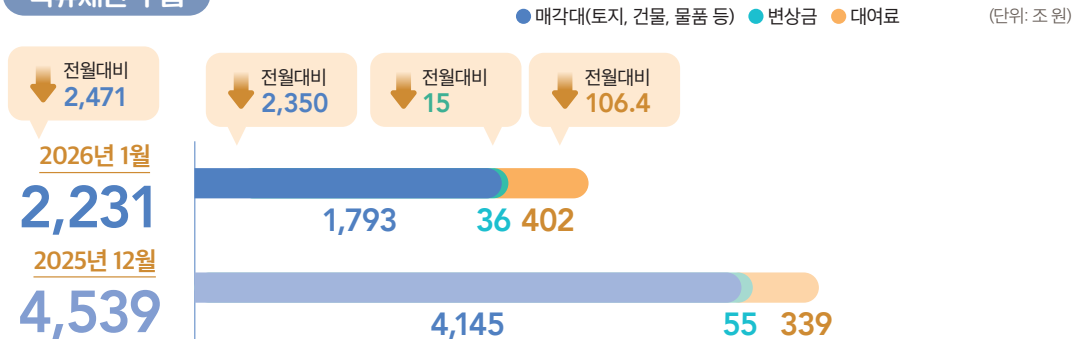


- 주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예시: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주 1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pp.16~21), 2025년, 2026년 자료는 잠정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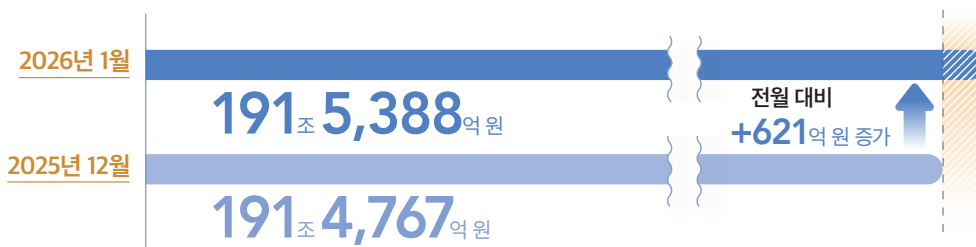
국유재산 수입



- 주 1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2 2024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2025년, 2026년 자료는 잠정
3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3.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2026년 1월 말

일반회계

870,986억 원

특별회계·기금

1,044,401억 원

191조 5,387억 원

318,308

74,502

475,595

2,581

985,943

6,066

50,781

1,611

2025년 12월 말

일반회계

870,986억 원

특별회계·기금

1,043,780억 원

191조 4,767억 원

318,308

74,502

475,595

2,581

985,371

6,066

50,732

1,611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2.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3월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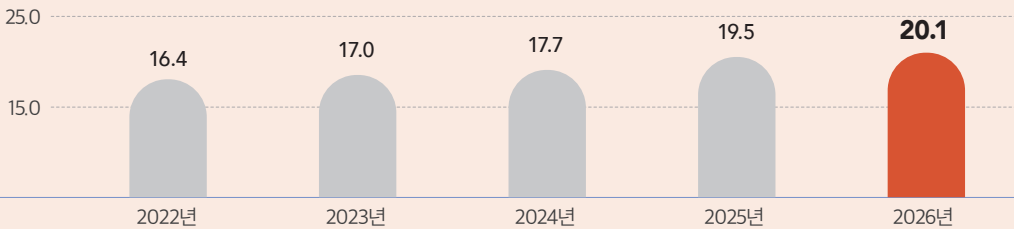
농림축산 식품부

임무: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비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20.1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19.6조 원**(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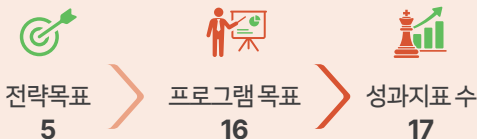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조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걱정없이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한다	9.5	48.5%	4
전략목표 II	농축산물의 식량주권 강화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3.8	19.4%	3
전략목표 III	농업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역량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강화한다	3.9	19.6%	4
전략목표 IV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0.6	3.1%	3
전략목표 V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촌환경정비와 농촌복지증진, 농촌경제활성화, 적극행정서비스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을 조성한다	1.8	9.4%	3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1 농가소득 증가율



정의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의 평균소득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

선정 사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충, 직불금 등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로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3.0	2.0	2.0	4.4
실적	- 3.4	10.1	- 0.5	- ¹⁾	-

주 1 2025년 실적치는 부처에서 2026년 5월 집계 예정

2 전략작물 자금률



정의

식량안보상 중요한 전략작물인 밀·콩·가루쌀 자금률

선정 사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 생산·자금 노력 및 수입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신규도입·육성 등 정책 성과를 반영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5.7	6.4	7.2	7.6
실적	5.0	6.1	6.8	- ¹⁾	-

주 1 2025년 실적치는 부처에서 2026년 11월 집계 예정

3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률

정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누적 선발된 인원 대비 누적 정착 인원을 측정

선정 사유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얼마나 영농에 정착하여 영농경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미래 농업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	-	-	83.2
실적	-	-	83.1	84.9	-

농림축산식품부

4

농축산물 안전 적합률



정의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추진 실적 대비 적합 비율

선정 사유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안전성 관리 강화 지표임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98.9	99.0	99.2	99.3
실적	98.8	99.4	99.3	99.3 ¹⁾	-

주 1 2025년 실적치는 잠정치

5

농촌 삶의 질 만족도 (도시대비)



정의

전문조사기관이 도시·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만족도 평균값의 도시 대비 농촌 비율

선정 사유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상대적 삶의 질 만족도 수치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임무와 직접적 연계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88.2	89.5	89.7	89.7
실적	83.5	88.5	87.2	90.1	-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프로그램

'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프로그램 목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추진

선정 사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기후 위기 심화 등 농산물 생산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급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임

주요 추진 전략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4년도 목표치	2024년도 실적치	달성률
1조 9,517억 원	비축농산물연간가격진폭률 (하향지표)	3.3%	2.1%	136.4%
	참여조직의 통합조직 원예농산물 출하비중	56.5%	60.5%	107.1%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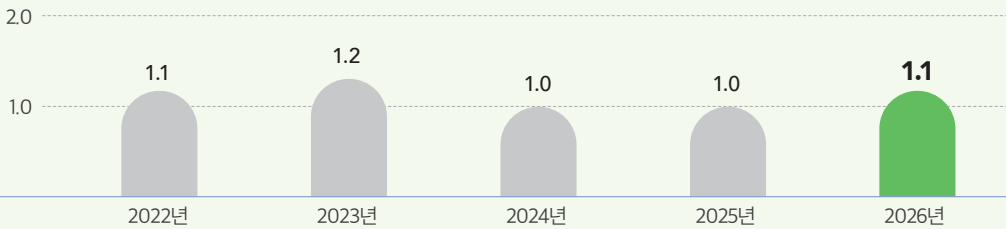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임무: 농업·식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복지와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비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1.1조 원 중 성과관리 대상 1.0조 원(90.9%)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미래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을 견인한다	7,823	75.7%	2
전략목표 II	농업기술 보급·확산으로 농촌진흥을 촉진한다	2,516	24.3%	5

주1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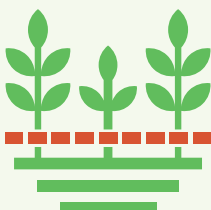
지표 성격



농촌진흥청

대표 성과지표

1 전략작물 개발품종 대체율



정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전략작물(벼, 밀, 콩) 신품종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선정 사유 식량주권 확보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전략작물(벼, 밀, 콩) 우수 품종을 신속히 보급하여 자급기반 강화 효과 기대. 또한 농촌진흥청 임무 중 농업·식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통한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실현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	37.2	39.1	41.1	41.9
실적	29.3	41.2	43.4	4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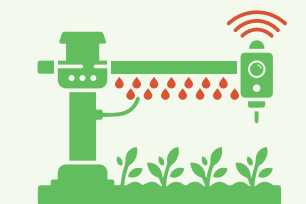
우수 프로그램

1 지역농업특성화

프로그램 목표 지역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생활 활력을 증진한다.

선정 사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 창업 등 농촌융복합 사업을 통해 상품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

주요 추진 전략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4년도 목표치	2024년도 실적치	달성률
1,324억 원	농산물상품화 매출액 증가율	19.8%	20.0%	101.0%

주요국 월간 재정 통계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January 2026(2.27.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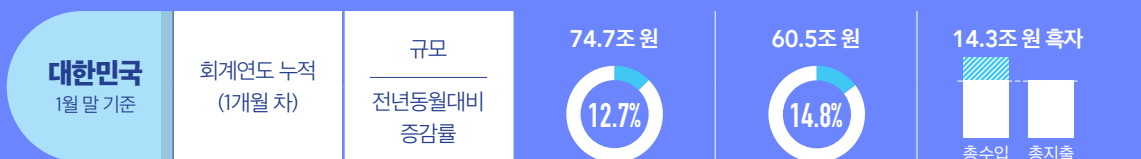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January 2026(2.20.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2.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janvier 2026(3.3.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January 2026(2.20. 발표)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3.

해외재정동향 (3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제권법(IEEPA) 상 상호관세 부과 위헌판결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에 따른 감세와 2월 고용·물가 전망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와 세계시장 영향

02 독일

- 독일 정부, 2026년 2월 월간 경제 동향 발표
- 독일 상공회의소, 2026년 성장률 1% 전망
- 독일, 유럽 내 독보적인 국방비 지출국으로 부상
- 도이체방크, '부채 브레이크 완화' 후 1년에 대한 평가 발표

03 영국

- 영국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 영국 정부, 2026년 춘계 경제전망(Spring Forecast) 발표
- 영국 통계청, 1월 월간 GDP 발표

04 프랑스

-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증세 여력 한계로 인한 지출 삭감 불가피
- 프랑스, 유가 상승에도 재정 여력 부족으로 대규모 지원책 배제

05 일본

- 일본 내각부, 2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표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 2.0 운영의 경제·재정 정책 최우선 과제 발표

06 중국

- 중국정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발표

국제기구

01 OECD

- OECD, 글로벌 부채 보고서 2026 발표

02 IMF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과의 연례 협의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

주요국 동향



2.20. |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상 상호관세 부과 위헌판결¹⁾

-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대부분의 글로벌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었다고 판결하고 해당 관세 조치를 무효화함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대외 자산동결, 금융·거래 제한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 연방대법원은 IEEPA가 전통적으로 적성국* 자산동결, 금융제재 등에 사용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법률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의회에 속한 과세 권한이라고 판단

*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전쟁법규 상 군사적인 행위를 가해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국가

- 이번 위헌판결은 위헌 6대 합헌 3으로 판결되어, IEEPA를 근거로 하는 글로벌 상호관세와 일부 국가와 품목에 부과된 추가 관세가 위법하므로 법적 근거를 상실
-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내 관세 환급 범위와 절차를 다루도록 조치

- 판결 직후 관세수입 처리와 무역정책 방향을 둘러싼 행정부, 의회,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 논의가 본격화, 향후 새 관세정책 설계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펜워튼(Penn-Wharton) 예측 모형*에 따르면, IEEPA 관세로 2월 19일까지 누적 징수된 관세수입은 약 1,68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미국 연방 정책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독립적 예측 모형(펜실베이니아 대학)

-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대법원판결 사흘 뒤인 2월 23일부터 IEEPA 기반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향후 관세 환급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²⁾

-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존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10% 수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도입과 추가 무역 조사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³⁾

- 새로 제안된 10% 글로벌 관세는 의회 승인이나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설계될 수 있으며, 기존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메우고, 협상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평가
- 수입업체들은 과거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청구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비용,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등 이중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

1)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supreme-court-rejects-trumps-global-tariffs-2026-02-20/><https://www.reuters.com/world/us-tariff-revenue-risk-supreme-court-ruling-tops-175-billion-penn-wharton-2026-02-20/><https://www.reuters.com/legal/legalindustry/tariff-ruling-will-not-save-tariff-evaders--pracin-2026-03-09/>

2) <https://www.reuters.com/world/us-us-customs-agency-stop-collecting-tariffs-deemed-illegal-by-supreme-court-2026-02-23/>

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ump-orders-temporary-10-global-tariff-replace-duties-struck-down-by-us-supreme-2026-02-20/>

4)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s-barkin-sticky-inflation-better-jobs-data-could-shift-risk-outlook-fed-bbg-2026-03-05/>

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market-analysts-react-us-israel-strikes-iran-2026-02-28/><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how-us-iran-tensions-could-shape-world-markets-2026-02-28/><https://www.reuters.com/business/wall-street-futures-slide-middle-east-conflict-escalates-2026-03-02/>

2.27.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에 따른 감세와 2월 고용·물가 전망⁴⁾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개인소득세 및 기업세 감세와 각종 공제 확대가 2026년 초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2월에는 대규모 환급과 임금 실수령액 증가가 겹쳐 소비와 고용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ONE BIG BEAUTIFUL BILLACT(OBBBA): 미국 기업투자 활성화와 미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대규모 감세, 국방 증액,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반도체 투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제정된 종합 경제·산업 정책 법안

-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Thomas I. Barkin) 총재는 최근 몇 달간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지표가 이어지므로, 향후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도 연준 목표를 상당 폭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
- 바킨 총재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연될 시, 연준의 위험 균형이 다시 물가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지적해, OBBBA 감세 같은 재정 완화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
- 2월 고용·물가 지수의 확정치는 공개 전이나, 세제 변화로 인한 가계의 단기 소비 여력 확대와 탄탄한 고용 지속,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가 결합하여 1분기 성장 흐름은 강화되는 반면 물가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과 주요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2026년 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유지하되,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망 기조가 우세

3.2.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와 세계시장 영향⁵⁾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공습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여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음
- 지난 2월 28일, 이란 고위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테헤란 주변 미사일 공격으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
- 이란은 역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복을 경고하는 등 군사적 대치 국면이 지속
- 국제 금융시장은 이란 공습 직후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강화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유가와 금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주요 증시는 하락 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 주요 산유국과 역내 세력의 추가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단기 국지 충돌에 그칠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 분쟁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원자재 시장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중
- 공습 직후 국제유가가 장 개시와 함께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오르며, 위험자산인 주식과 고위험 통화는 일시적으로 약세
- 3월 2일 뉴욕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 소식과 함께 S&P500 지수 등 주요 지수가 하락했으나 장중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혼조세로 마감하는 등, 단기 충격과 일시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교차 중

- 에너지, 통화, 채권시장에서는 사태 장기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브렌트유 가격이 세 자릿수(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중동 지역은 세계 원유, 가스 공급의 핵심 허브로, 호르무즈 해협은 해상 원유 수송의 주요 관문
 - 이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봉쇄 가능성은 유가, 운임, 위험 등에 따른 프리미엄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될 높은 가능성이 존재
-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이나 공격 확대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계속 발생할 경우, 과거 중동 분쟁 때와 유사한 시장 변동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함
 - 유가는 현재의 기준선(약 73달러)보다 5~10달러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일 경우 프리미엄 (50% 수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
 - 언론, 시장 전문가의 분석 등에서는 중동 긴장 지속이 공급 차질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각국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 재상승 리스크와 성장둔화 리스크 사이에서 통화정책 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



2.13. | 독일 정부, 2026년 2월 월간 경제 동향 발표⁶⁾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는 2월 월간 경제 동향을 발표하며, 소비 활동이 소폭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 지난해 말 산업 생산은 에너지 부문의 약세로 1.9%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생산 증가
 - * 특히 국내 대형 물량으로 인한 12월 신규 수주 7.8% 증가로 향후 산업 활동의 점진적 회복 기대
 -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전체 소매업은 2.7% 성장
 - * 최근 심리지표들은 2026년 초부터 소비 활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 다만 1월 물가상승률이 2.1%로 소폭 상승하고 노동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등 고물가 및 내부 비용상승 요인이 회복 속도를 제약하고 있음
 - 2026년 1월 물가상승률은 2.1%로 전월(1.8%) 대비 소폭 상승
 - *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임금 인상과 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주도
 - 고용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지표 둔화로 인해 1월 실업률이 정체되는 등 고착화된 상태
- 1월 기업 파산 건수는 전월 대비 8% 감소하여 경영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

6) <https://www.bundeswirtschaftsministerium.de/Redaktion/EN/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6/20260213-the-economic-situation-in-germany-february-2026.html>

2.27. | 독일 상공회의소, 2026년 성장을 1% 전망⁷⁾

- 독일 상공회의소(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kammer, 이하 DIHK)는 독일 경제가 2026년에도 저성장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DIHK는 2026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약 1.0%로 전망하며 작년 10월 전망(0.7%) 대비 상향 조정
 -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낮아 독일 경제가 회복이 아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
- 독일 기업들은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모두 축소할 계획을 보이고 있음
 - 독일 기업 대상 조사 결과, 투자 확대 계획 기업은 23%, 투자 축소 계획 기업은 31%
 - 고용 측면에서도 신규 채용 계획 기업은 12%, 인력 감축 계획 기업은 23%
 - 주요 경영 리스크는 수요·비용·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 경영 리스크 응답 비중은 내수 부진 59%, 인건비 상승 59%, 정책 불확실성 58%, 에너지·원자재 가격 부담 48% 차지
- DIHK는 고비용 구조와 정책 불확실성을 중장기 성장 제약요인으로 지적함
 - DIHK는 현재 투자지표, 고용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
 - 높은 노동비용 및 에너지 비용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며, 단기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진단
 - 규제 완화, 비용 부담 완화, 구조개혁 추진 등 중장기적 기업환경 개선 정책 필요성을 강조

2.23. | 독일, 유럽 내 독보적인 국방비 지출국으로 부상⁸⁾

- 독일은 과거 군사력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유럽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압박 속에서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결정함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군사국가 역할을 요구 받는 상황
-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GDP 대비 2% 국방비 기준을 상향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더 높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독일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장기적으로 3% 이상의 국방비 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
 - 이는 유럽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
- 국방비 확대는 재정 규율(부채 제한)과 충돌하며 정책적 딜레마 발생확률이 상승할 수 있음
 - 사회 내부에 군비 확대에 대한 역사적 부담과 함께 복지와 국방의 지출 우선순위 갈등이 존재
 - * 국방비 확대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정치·사회적 논쟁 사안에 해당
- 독일의 국방비 확대는 단일 국가 정책이 아닌 유럽 전체 재무장 흐름의 핵심 축에 해당함
 - 향후 유럽은 공동 방위 역량 강화, 방산 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독일이 그 중심에서 재정·군사적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7)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y-remains-stuck-10-growth-2026-expected-dihk-says-2026-02-17/>

8) <https://www.nytimes.com/2026/03/03/world/europe/germany-military-defense-spending-europe-nato.html?smid=url-share>



2.18. | 영국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¹⁰⁾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하 ONS)은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함
 -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4%)보다 0.4%p 하락
 - * 교통, 식품, 비주류 음료 부문의 가격 하락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월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
 - 근원물가상승률(core CPI)은 전년 대비 3.1%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2%)보다 0.1%p 하락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부 재화(에너지, 식품, 주류, 담배)의 가격 변화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3.3. | 영국 정부, 2026 춘계 경제전망(Spring Forecast) 발표¹¹⁾

-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대규모 증세보다는 안정적인 재정관리에 초점을 둔 <2026년 춘계 경제전망>을 발표함
 - 차입 감소와 국채 금리 안정화로 인해 영국의 재정 준칙 대비 가용 재원인 재정 여력(fiscal headroom)이 약 240억 파운드 소폭 증가
 - 민생 지원책으로는 에너지 비용 150파운드 감면 유지, 유류세 동결 연장 등 영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이하 OBR)은 2026년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함¹²⁾
 - OBR의 이번 하향 조정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 가능성을 반영

3.13. | 영국 통계청, 1월 월간 GDP 발표¹³⁾

- 영국 통계청(ONS)은 1월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0%대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2026년 1월 GDP 성장률은 작년 11월 0.2%, 작년 12월 0.1%에 이어 0%를 기록하였음
 - 부문별 성장률은 서비스 부문은 0%, 생산 부문은 0.1% 하락, 건설 부문은 0.2% 증가
- 2026년 1월 기준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1월 기준 0% 증가, 작년 12월 기준 0.1% 증가에 이어 2026년 1월 0.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교통, 식품, 비주류 음료 부문 가격 하락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월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2월 기준 0% 증가 이후 0.2% 증가
 - 생산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2월 기준 1.2% 증가에 이어 1.3% 증가
 - 건설 부문 최근 3개월 실질 GDP는 작년 11월 기준 0.9% 증가, 12월 기준 2.1% 감소에 이어 2.0% 감소
 - 근원물가상승률(core CPI)은 전년 대비 3.1%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수치(3.2%)보다 0.1%p 하락
 - * 근원물가상승률은 일부 재화(에너지, 식품, 주류, 담배)의 가격 변화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



2.19. |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증세 여력 한계로 인한 지출 삭감 불가피¹⁴⁾

-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26년 재정적자 목표가 매우 불확실(highly uncertain)하다고 평가함
 - 당초 4.7%에서 완화된 5.0% 목표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
 - 사회보장예산에서 계획된 주요 절감 조치가 폐기·완화되면서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확대
 - 프랑스는 이미 유로존 내에서도 조세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향후 추가 증세보다 지출 절감이 불가피한 상태임
 - 2026년 예산은 약 1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세입 조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유로존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지출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평가*
- *특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부과를 거의 전면적으로 연장한 점을 지적

3.10. | 프랑스, 유가 상승에도 재정 여력 부족으로 대규모 지원책 배제¹⁵⁾

- 프랑스 정부는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새로운 ‘가격 방어막(bouclier tarifaire)’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 모드 브레종(Maud Bregeon) 에너지 담당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연료 구매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trop tôt)고 강조
 - 또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inconcevable)”고 밝히며, 에너지 제품 전반의 VAT를 5.5%로 인하할 시 170억 유로의 재정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함
 -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주유소 가격 점검 강화 및 전력비축유 활용 검토 등 제한적 조치에 그침
 - 세바스티앙 르코르누(Sébastien Lecornu) 총리는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또한, 프랑스 정부는 G7 국가들과 함께 전력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¹⁶⁾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근본적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 제기

9) <https://www.nytimes.com/2026/03/03/world/europe/germany-military-defense-spending-europe-nato.html?smid=url-share>

10)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january2026>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spring-forecast-2026-the-right-economic-plan-for-britain>

12)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10495/>

13)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monthlyestimateuk/january2026>

14) <https://www.reuters.com/business/french-tax-hikes-tapped-out-spending-cuts-inevitable-says-audit-office-2026-02-19/> (접속일: 2026-03-13)

15)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6/03/10/france-has-no-budgetary-leeway-to-counter-rising-fuel-prices_6751280_19.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 (접속일: 2026-03-13)

16)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3/09/liberer-les-stocks-strategiques-de-petrole-l-arme-envisagee-par-le-g7-pour-calmer-les-marches_6670087_3234.html (접속일: 2026-03-13)



2.18.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 2.0 운영의 경제·재정정책 최우선 과제 발표¹⁷⁾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각 출범 첫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는 세제 개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함

- 예산 및 세제 개혁으로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제 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
- 또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부담을 덜고, 사회보장과 과세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표명
-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전략적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예산 편성 방식을 개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
- 외교·안보 전략으로는 새로운 전쟁 형태에 긴급히 대응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

*정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위기 발생 전에 예방하며, 전략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2.28. | 내각부, 2월 월간 경제보고서 발표¹⁸⁾

- 경제보고서에서 일본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민간 소비는 회복 추세를 보여주며 기업 투자가 다소 증가하나, 수출과 산업 생산은 정체*

*2025년 3분기 GDP가 -2.3%로 감소했으나 이는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미국 자동차 관세, 주택투자 감소 등)

- 일본 정부는 향후 비용상승형(cost-push) 인플레이션에서 임금주도형(demand-pull)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목표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2.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
-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전체 고용률이 80%에 달하는 등 고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도 회복세가 지속되나, 추가적인 노동 공급 확대 여력은 제한

- 단기적 전망으로는 고용 및 소득 상황 개선과 정책 효과 등이 중간 정도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가격 변동과 미국 무역정책 상황 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하방 위험과 금융 및 자본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강한 일본경제”를 목표로, 물가상승 대응 및 생활 안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국방·외교력 강화 등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중앙은행과 경제 및 물가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정책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
- 중앙은행이 경제 활동, 물가, 금융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통화정책 관리를 통해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을 확인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3.12. | 중국정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발표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주요 내용이 제시됨¹⁹⁾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결정에 앞서 가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국 최고정책자문기구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 제정, 국가예결산의 심사·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함

-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4.5~5%로 설정하였으며 내수 진작, AI, 첨단제조업, 과학기술 자립이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함

- 전년 5.0%보다 낮은 수준으로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로 평가

-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26년 과학기술 지원 예산은 약 1.3조 위안 예정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책정²⁰⁾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목표치는 5.5% 내외로 전년대와 동일

- 외신은 중국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성장둔화에 대응해 기술강국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²¹⁾



17) 일본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TAKAICHI Sanae" (2026.2.18.). <https://japan.kantei.go.jp/105/statement/202602/18kaiken.html>

18)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Monthly Economic Report" (2026.2.).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2026feb.html>; "Recent Developments in the Japanese Economy: January 2026".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e/reference/reference20260129.pdf>

19) https://english.www.gov.cn/2026special/2026npccandcpcc/202603/05/content_WS69a8ea12c6d00ca5f9a0987b.html

20) https://english.www.gov.cn/news/202603/06/content_WS69aadad8c6d00ca5f9a09aa5.html

21)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parliament-approve-growth-policy-plans-amid-growing-us-rivalry-2026-03-04/>

국제기구
동향3.4. | OECD, 글로벌 부채 보고서 2026 발표²²⁾

- OECD는 2026년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의 시장성 차입 규모가 29조 달러²²⁾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차입 증가의 배경으로 국가의 재정조달 수요 확대와 기업의 채권시장 활용 증가를 제시
 - * 이는 2024년보다 4조 달러(17%) 증가한 수준이며, 10년 전의 두 배에 해당
- OECD는 차입 규모 증가 자체뿐 아니라, 높은 조달 금리와 장기채 발행 비중 축소에 따른 차환 위험 확대, 가격 민감도가 높은 투자자 및 레버리지 투자자 비중 확대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함
 - 2025년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차입 중 약 13.5조 달러가 기존 부채 차환용이었으며, 이는 총차입의 약 80%에 해당
 - 최근 일부 국가가 높은 장기금리를 피하기 위해 발행 만기를 단축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 차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
 - 대규모 시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이 외부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기술기업이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 2025년 9개 주요 시 기업은 채권시장에서 1,220억 달러를 조달, 이들의 2026~2030년 누적 자본지출 계획은 4.1조 달러로 추정
- OECD는 부채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의 차입이 단기적 자금조달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정부에는 건전한 재정운용, 부채의 지속가능성 확보,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

2.25. | 국제통화기금(IMF), 미국과의 연례 협의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²³⁾

- IMF는 2026년 미국과 제4조 연례 협의에 대한 협의단 성명에서 미국의 최근 경제 성과와 재정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 발표함
 -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미국과의 Article IV 협의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Scott Bessent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Jerome Powell 의장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요 의견을 논의
 - * 본 보고서는 IMF 직원들이 회원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IMF 이사회' 승인 이전 예비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매년 회원국 경제를 점검하는 Article IV 협의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

2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global-debt-report-2026_e9d80efd-en.html

23) 국제통화기금(IMF), "United States of America: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6 Article IV Mission" (2026.2.2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6/02/25/cs-02252026-united-states-of-america-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6-article-iv-mission>

- 미국 경제는 지난 2025년 1월 세계경제전망(WEO) 전망과 일치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생산성 향상 덕분에 단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2.2%였으며, 2026년에는 2.4%로 소폭 상승 전망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관세 영향으로 2026년 초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7년 초에는 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2026년 1월 기준 4.3%로 완전고용에 근접
 - 금융 상황은 연중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
 - 연방 재정적자는 2024 회계연도 GDP 대비 6.3%에서 2025 회계연도 5.9%로 감소
- 반면, 재정적자 확대·관세·이민·규제완화 정책이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5.9%였으며, 향후 6%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은 2031년까지 1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관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축소 및 세수 확보 효과가 있으나, 공급 충격으로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을 유발
 - 이민 국경 단속 강화와 추방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신 노동력 규모를 줄여 고용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금융·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완화 추진 중이며,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나 구체적인 효과는 아직 불확실
- 미국은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정책을 재조정하였으며, IMF는 이러한 2025년에 시행된 정책 전환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미국, 무역파트너, 더 넓게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권고함
 - 재정 건전성 확보로서 세수 확대 소비세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 재조정 필요
 - 무역·관세 정책 개선으로서 무역 파트너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제한과 산업 정책 왜곡을 조정하고 축소
 - 노동시장·이민 정책으로서 기술·역량 기반 이민 확대와 노동 공급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
 - 분배·사회적 안정성으로서 저소득층 지원 확대(아동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강화)와 개인 저축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이러한 대안들은 미국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참여 제고, 공공 부채를 하락세로 전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빈곤 감소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03

03 March

| 경제 |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한국은행, 3.10)

- 2025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 명목 GDP는 전기대비 3.9% 증가,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
-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 명목 GNI는 전기대비 4.0% 증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
- 2025년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0% 성장
- 명목 GDP는 2,663조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5,242만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2026년 2월 고용동향 (재정경제부, 3.18)

- 2026년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 15~64세 고용률은 69.2%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4만 명 증가하여 25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
- 업종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 효과반영 및 설 연휴 전 성수품 확대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전월대비 확대, 보건·복지는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로 인해 증가폭이 확대, 운수창고 및 예술여가 등도 증가폭 확대
- 제조업은 양호한 수출실적 및 기업심리 회복세로 인해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업은 설 연휴 전 조업감소로 인해 감소폭이 확대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부문 보완 노력을 강화할 계획

| 재정 |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3.4)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수)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
- 금번 회의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그간 논의내용 및 향후 계획,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수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토의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 설립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제언으로 임금피크제 연계 고용 연장, 국가 차원의 기후리스크 관리, 아동수당 도입 등 실제 논의를 다양한 정책에 반영
-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을 목표로, 청년세대 및 미래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임에 동의하여, 실효성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업할 계획



중동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준비 착수 (기획예산처, 3.13)

-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 필요”와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신속한 추경 편성”에 따른 후속조치
- 세계적 불확실성의 빠른 확대와 우리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선제 대응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
-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추경 사업 발굴 필요성을 당부
- 기획예산처는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신속한 추경안 마련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 재정 |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이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는 경제현상을 정치투쟁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맑스(K. Marx) 경제학을 지칭하기도 하였고, 1970년대에는 정치현상을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분석하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을 의미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경제현상의 설명에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와 상황들을 추가로 감안하는 분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세 번째 의미는 고전학파의 정치경제학 관점인데, 경제학을 경제적 변수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재정제도 이야기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세히 조명하기로 한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前 조세재정연구원장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타당성조사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하며 투자규모가 대형화하고 투자계획 관련 문제들이 복잡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전문적 기법에 의한 평가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0년에 경제기획원 훈령 제50호로 '투자사업심의회 규정'을 마련하였고, 1977년에는 경제기획원 내에 투자심사 전담 조직(투자심사국)을 설치하였다. 투자심사국은 '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의 의뢰로, '외국차관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의뢰로 투자사업 심사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투자심사의 주요 항목들은 시장성, 투

자규모의 적정성, 입지조건, 수익성,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등으로 구성되었다.¹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차관이 줄어들면서 투자심사 기능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투자 사업'에 집중되었는데, 경제기획원은 후생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별 지침을 발간하며 사업주관 부처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1979년에 「공공부문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1982년에 「투자심사편람(운수부문)」과 「투자심사편람(상하수도 부문)」을 각각 발간하였다. 특히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건 교수는 교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투자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조성락(1980), "정부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회보」 제177호,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소장, pp.157~163 그리고 김동건(1980),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회보」 제177호, 국회사무처, pp.124~133 참조



역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OECD 방법의 적용이 한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후생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을 적극 옹호하였다.²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기획원이 폐지되고 재무부와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출범하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사업 주무부처 중심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이 때문에 타당성 평가는 범정부적인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전력산업에서는 전원개발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 개념으로 접근하며(전력산업의 공익성을 반영하고자) 범정부적 관점에서 추정하는 연구들이 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³ 그리고 교

통부문의 고속도로 기본설계에서는 공학자들이 후생경제학적 소비자잉여 개념을 활용하여 타당성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차량운행비, 유지관리비, 시간당 가치 등 주요 계수들을 사업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등장

한국의 타당성 평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 당시 예산당국이었던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절감을 위해 사업부처의 타당성조사들을 전면 조사하였는데, 1994년~1998년 중 타

2. 김동건(1980), p.130 참조. 김동건 교수는 199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교재인 「비용편익분석」을 발간하였다.

3.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적 할인율 추정 연구들에 대해서는 옥동석(2000년), “실용적인 사회적 할인율: 개념과 적용상 쟁점,” 『공공경제』 제5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137~166 참조

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33개 사업 중 ‘타당성 없음’으로 조사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⁴ 예산당국은 사업부처 주도의 타당성 분석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당국이 직접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예산당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 대신에 대통령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1999년 4월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중략)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중략)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연이어 예산당국은 자신의 소관 하에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20개의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KDI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KDI 연구진은 일반지침 연구에서 후생경제학적 비용편익분석의 채택을 천명하였다.⁵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사업의 영향들을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소비자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로써 화폐화하는 분석 도구이다. 이는 국내의 시장가격 체계가 충분히 발달한 선진국에서 채택가능한 방법인데, 한국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전하였기에 이러한 방법의 채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KDI는 개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한 ‘경제성 분석’과 비용편익분

석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수요 추정, 편익 및 비용의 추정, 재무분석, 민감도 분석 등 화폐적 가치로의 전환이 가능한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대부분 시장가격이 활용되지만 시장실패로 인한 비(非)시장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잠재가격(shadow price)을 적용하였다. 반면 정책적 분석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민자유치 가능성, 환경·국방·문화 등의 고려사항 평가, 지역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예산당국은 각 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추진사업’, ‘추진 보류사업’,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구 사업에 민감했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⁶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편익·비용 비율이 최소한 1을 상회하여야 재정자금을 투입할만한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널리 인정되면서 예산당국은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2000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였다.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도입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KDI 연구진은 예산당국으로부터 정량적 분석(경제성 분석)과 정성적 분석(정책적 분석)을 통합한 ‘단일점수’를 요구받으며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점수’에 대한

4. 기획예산위원회(1998년),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보도자료, 1998년 9월 22일

5. 한국개발연구원(1999),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p.4 참조

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예산 관련 정책자료집」, 1999년 11월,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pp.271~277 참조

예산당국의 요구는 투자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의 정치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책임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투자결정 책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당시 KDI 연구진의 항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팀 임무는 …(중략)… 최종결정을 내리는 기관 혹은 기구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중략)… ‘단일점수화’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보고서에 병렬적으로 나열만 하는 것이 오히려 최종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하여금 편견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그러나 이듬해인 2000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산당국의 ‘단일점수’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기준분석’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⁸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들을 구분하고 각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합산된 종합점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다기준분석의 결정적인 단점은 항목별로 부여하는 가중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HP는 다기준분석의 한 종류이지만, 그 가중치들을 그나마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AHP는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①의사결정집단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②문제에 대한 목표-대안의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③평가항목들의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 설정(Weighting); ④점수평가(Measurement); ⑤일관성을 위한 재검토(Feedback) 단계 등으로 구성된다.⁹ 이러한 AHP는 의사결정집단의 구성 요원들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예산담당 공무원, 조사 연구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진 등) 구성하면 나름대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비용편익분석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며 ‘단일수치(또는 순편익 금액)’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비용편익분석은 그 가중치를 소비자의 ‘지불용의’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비용편익분석은 시장가격이라는 가중치를 기준으로 공공사업의 영향을 비용과 편익이라는 화폐적 척도로 평가하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비 시장적 가치들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시장을 상정하여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가 얼마인지를 추론한다. 이러한 잠재가격 평가는 영미권 경제학계에서도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기에 당시 한국에서는 잠재가격 분석 방법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 만약 KDI 연구진이 잠재가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면 예산당국의 ‘단일점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¹⁰ 당시에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기준분석으로서의 AHP 도입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7. 한국개발연구원(1999), pp.136~137

8. 한국개발연구원(2000),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개정판)」, pp.145~147

9. 한국개발연구원(2000), pp.149~150 참조

10. 잠재가격을 주로 연구하였던 KDI의 「일반지침 연구」는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수행되지 않았다.

AHP 가중치의 정책적 결정

AHP 분석의 가중치들이 AHP 평가팀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AHP 분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KDI는 AHP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자들을 확대하고, 당시까지 누적된 AHP 평가자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표준적인 가중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¹¹⁾ 2004년 이전에는 AHP 평가팀이 평가항목들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2004년부터는 과거 자료를 이용한 표준 가중치를 사전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KDI는 2001~2004년 도로·철도부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의 표준 가중치를 45~65%로 결정하였다.

더구나 2005년부터는 정부가(당시 기획예산처) AHP 분석에서 '항목별 가중치 산정이 평가자 의견에 전적으로 좌우됨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에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표준적인 가중치 산정을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

다.¹²⁾ 또한 정부는 AHP 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이 미미하여 '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와 대형투자사업의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지 못한다'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중치 산정 범위를 경제적 타당성(40~50%), 정책적 타당성(25~35%), 지역균형발전 타당성(15~25%)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2005년의 정부 조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자율적 집단결정'이라는 AHP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인데, 이는 사업결정이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령 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렬되었는데, 2007년의 '국가재정법'과 그 시행령, 2009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7년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그리고 KDI의 사업부문별 세부지침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표> 예비타당성조사의 법령 체계

명칭	내용과 기능	형태
국가재정법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근거를 규정	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	대통령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예타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 • AHP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항목별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책정 제시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KDI의 각 부문별(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기타 등) 세부지침에 대한 기준 제시 • 수요 추정을 기본으로 하여 편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비용은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산정함을 명시	기획예산처 훈령
사업부문별 세부지침	• 기획예산처 훈령에 따른 사업부문별 세부지침 규정	KDI 연구

11. 한국개발연구원(200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pp.343-352 참조

12. 기획예산처(2005),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보도자료, 2005.09.23, 국회도서관 소장, p.4 참조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는 기획예산처 훈령에서 AHP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운용지침에 명문화되어 있는 항목별 가중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심지어 잠재가격으로 화폐화할 수 있는 항목들까지(일자리,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정성적인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중치들이 정부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결정 변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과 전문적 판단의 분리

이처럼 AHP의 가중치가 정치적 정책변수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면서 2016~2019년 기간 동안 이들 수치는 매년 변경되었다. 이러한 수시적인 변동은 종합평가의 항목별 가중치 선택이 전문가적 추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김태일 교수는 AHP의 방법론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는데,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타당성 분석에 AHP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의해 타당·부당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독특한 제도이다. AHP는 실제로는 주관적·정성적인 평가지만 마치 객관적·양적인 평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 예타에서 AHP를 적용하게 된 데는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천명한 예타 목적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AHP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적·정성적 평가를 객관적·양적 평가처럼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러한 특성은 양날의 칼이 된다. 기존에 KDI가 담당했을 때는 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정치권의 압력에 일정 부분 저항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중치 변경과 함께 AHP 평가 주체를 기재부 주관으로 옮기면 이전과는 반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¹³

이러한 지적은 1999년 KDI 연구진이 제기했던 ‘전문적 조사보고와 정치적 최종결정 사이의 책임 분화 부재’라는 근본 원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과제는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적 ‘조사보고’와 정치적 ‘최종결정’의 역할 분화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⁴ 시장가격을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은 전문적인 ‘조사보고’의 영역에 속하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에 대한 ‘종합평가’는 정치적인 ‘최종결정’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와 국회는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에서 각 항목들에 부여한 가중치 그리고 그 결정의 논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최종결정’을 전문적인 ‘조사보고’의 영역으로 위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모호하게 할 뿐이다.

13. 김태일(2019),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및 개편안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53권 제3호(2019 가을), p.261 참조

14. 2019년에 설치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정책적 ‘최종결정’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이러한 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이 가리키는 산업의 미래

2026년 정부 예산은 기존의 재정 역할을 벗어나 성장과 산업구조 견인에 중심을 두고 있다. 첨단기술·안보·에너지에 약 70조 원을 집중 배분하며, 재정이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 산업 지형을 주도하는 핵심 레버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의 재정 흐름을 읽으면 향후 10년의 산업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 센터장



2026년 재정 운용 방향의 변화

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재정의 세 가지 역할을 자원 배분 및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기 안정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국방이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고 R&D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하고, 누진세 및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줄이는 방식을 통해 고용과 물가를 안정시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2026년 정부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전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운용 방향과는 다른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예산안에 담고 있다. 2026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회복 및 경제 성장 견인”으로 재정의 역할이 성장과 산업구조를 견인하는 역할로 전환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지원”을 슬로건으로, 정부재정은 고위험·고외부효과 영역에 초기 수요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장 설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약 728조로, GDP대비 약 30% 수준이다. 이는 국민경제에서 정부재정의 비중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특히 R&D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8%, 6.9%로 계획되어 있다. 2026년 R&D 분야 재정투자는 35.5조 원으로 전년도 29.6조 원에서 약 5.7조 원(19.9%) 증가하였

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는 32.3조 원으로 전년도 28.2조 원에서 약 4.1조원(14.7%) 증가하였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지원이라는 중점투자방향이 드러나는 자원배분 계획으로, 6대 첨단기술(AI, 첨단바이오, 문화·콘텐츠, 국방, 에너지, 첨단로봇·제조)에 대한 중점투자와 첨단산업기술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R&D 분야 투자 현황

R&D 분야 주요 자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를 통한 경제 사회 대전환 부문 2.3조 원(106.1% 증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부문 2.6조 원(19.1% 증가), 초격차기술 확보 부문 8.5조 원(29.9% 증가), 방산(국방과학기술 혁신) 부문 3.9조 원(25.3% 증가), 중소벤처 부문 3.4조 원(39.3% 증가) 등이다. 재정투자 방향은 첫째,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첨단산업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둘째 안정적인 연구지원체계의 개선, 셋째 우수 인재 유치와 처우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R&D 부문 재정투자 증가분은 AI, 첨단바이오, 문화·콘텐츠, 국방, 에너지, 첨단로봇·제조 등 기술주도 성장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재정투자의 큰 방향성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축으로 딥테크·글로벌·스케일업 TIPS, TRL 점프업 등 민간 투자 연계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기반 사업화 보증을 신설하여 민간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AI·딥테크 특화 창업패키지, 유니콘 브릿지 사업 등은 창업 초기부터 스케일업 단계까지 기업 성장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혁신지원(첨단·주력 산업 고도화, 소부장 공급망 안정지원 등) 부문 8.2

조 원(18.8% 증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용자 지원, 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부문 11.6조 원(8.4% 증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너지 전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부문 5.1조 원(10.9%) 등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

※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AI 대전환 (15대 과제)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	
기업	• AI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진입 • AI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AI 선박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AI 가전 글로벌 AI 가전 시장점유율 1위 • AI 드론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 및 활용 • AI 팩토리 제조기업 AI 도입률 40% • AI 반도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탑재 제품 출시	첨단 소재·부품	• SIC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LNG선 시장점유율 70%, 세계 1위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응용기술 확보 • 그래핀 에너지·센서 분야로 상용화 확대 • 특수탄소강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기술 1위
공공	• AI 복지·고용 모든 행정서비스 AI 도입 • AI 납세관리 납세 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 신약심사 신약심사 기간 주요국 수준 단축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HVDC 해상풍력 및 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SMR 그린수소 기술확보·SMR 표준설계인가 추진 • 스마트농업·수산업 AI 기반 스마트 농업·양식 선도지구(17개소) 조성 • 초고해상도위성개발·활용 다목적 위성 8호 개발·기후 예측모델 개발
국민	• 국내 AI 인재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해외 AI 인재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K-불업	• K-바이오·의약품(AI-바이오)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콘텐츠 수출 250억 불 • K-뷰티통합클러스터 중소기업 수출 100억 불 달성 • K-식품 K-식품 수출 150억 불
기반 조성	• 데이터 개방 데이터 시장규모 확대 • 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 진입 • 국가 AI 협력 세계 최고 수준 버티컬 AI 확보		

재정투자 방향은 첫째 주력 첨단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유망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차전지 소부장 등 핵심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별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해양·항만·방산(동남권), 에너지·자율자동차·반도체(서남권), 첨단과학·산업(중부권) 등 지역주력산업 중점을 육성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용자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보증을 강화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셋째,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확대, AI·딥테크 분야에 대한 특례보증과 특화자금의 확충과 유니콘 브릿지 사업,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2026년 산업 및 R&D 분야 재정투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 신성장산업, 방산, 에너지 전환 등이다. 특히 2026년 재정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AI라고 할 수 있을 만큼 AI 관련 지원에 대한 방향성과 예산증액이 눈에 띄는 가운데, AI 3강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총 10.1조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적용(AI 스프린트 300) 등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총 2.6조 원, 기반조성사업에 7.5조 원이 투입되었다.

AI 기반조성사업에는 GPU 5만 장 확보, 데이터 및 클라우드 등의 AI 기반 조성, 연구지원센터 등 연구기반 조성, 그리고 AI 혁신펀드(0.1조 원), 딥테크·AI 펀드(0.3조 원) 등 혁신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AI 전환 시대에 기술경쟁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 재정정책

신성장산업의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될 계획에 있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AI(약 30조 원), 반도체(21조 원) 등 10대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방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국방 예산 8.2% 증액과 함께 방산 부문에 대한 R&D 투자도 전년대비 예산이 25.3% 확대하며, K-방산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K-방산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등 첨단기술 접목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K-방산 육성을 꾀하는 모습이다. 다년계약과 R&D 양산 연계, 수출금융이 결합되며 신성장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안보의 확보와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부문도 핵심축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전기차,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재정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기술 기반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산업 재편 과정을 반영한다.

재정은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고 민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산업부문의 전략적 지속가능성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재정투자의 방향은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호조판서와 평안감사

조선은 중앙정부가 전국 재정을 일괄 관리하는 중앙집권 국가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 호조판서와 평안감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호조가 만성적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평안도의 비축미를 활용하려 했고, 평안감사는 지역 특수성을 이유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원칙을 중시하던 조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호조판서와 평안감사를 모두 역임한 인물들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원칙을 지키고 타협했는가를 살펴본다.

박광일 역사작가, 여행이야기 대표

조선의 중앙집권 재정 체제

조선시대 후기, 호조판서와 평안감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요즘으로 본다면 이 둘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사이의 관계이니 긴장감이 있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이 아닌 평안도라는 특정 지방을 꼭 짚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지금과 비교해서 상상하기는 어렵다. 조선 후기, 호조와 평안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선은 전근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중앙집권 국가였다. 같은 시기 서양의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와 비교해보면 그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세금만 생각해보면 조선은 나라 안의 모든 재원을 국가에서 파악하고 세금을 정하여 국가기관을 통해 거둔 뒤 다시 각 국가기관과 지방에 재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세종 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공법의 시행, 조선 후기 공납을 쌀로 바치는 대동법은 전국적 시행을 위해 많은 조사와 단계를 거쳤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사또, 수령이 파견된 지방의 행정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시기 서양에서는 영주가 국왕과 별

개로 세금을 거둬 쓰기도 하며 세금 문제로 국왕과 타협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시초였던 삼부회 소집도 국왕과 영주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일이었으니 그 차이가 조선과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의 지방관, 곧 수령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농업 장려와 함께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둬서 중앙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평안도의 특수한 지위와 특혜

그런데 조선의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가는 데 지금과 달랐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토지에 매긴 세금뿐 아니라 요역과 같은 노동력, 특산물 등을 바치는 공납도 있었다는 점이다. 또 토지세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내기도 했으나 이는 산이나 바다 마을에 한정된 것이고 대부분은 쌀이나 보리, 콩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니 세금을 중앙으로 옮기는 수송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다. 이 부담은 세금을 내는 농민, 지자체가 책임져야 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국방이나 사신 접대에 부담이 컸던 평안도에서는 거둬들인 세금을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운용



01

01 체제공 초상화 호조판서와 평안감사를

모두 역임한 정조 시대의 대표 관료,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02 호방판서지인(戶房判書之印) 호조판서의

관인을 만들기 위해 나무로 제막한 모본으로

호조판서는 호조에서 가장 높은 품계인 정2품이다,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03 화성성역의례 호조 재정을 활용한 정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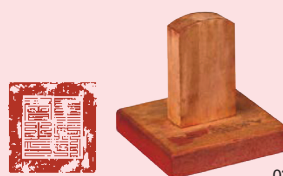
핵심 사업 화성 축성의 과정과 규모를 기록한 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04 경국대전 조선의 행정 원칙과 법제를 담은

법전으로, 호조를 포함한 모든 관청의 체계와

업무를 규정한 기본 제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02



03



04



05 탁지전부고 정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전국의 토지 현황, 세입·세출을 기록한 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할 책임자는 평안도의 책임자, 곧 평안감사였다. 실제로 평안도 일대는 명이나 청에서 오는 사신을 접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컸다. 평안도의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쌀이나 다른 현물의 수송비를 줄여 효율을 높이곤 하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청과 관계가 안정되고 사신이 드나드는 횡수도 1년에 2회로 줄어들면서 평안도는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양의 쌀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운신의 폭이 컸던 ‘평안감사(평양감사로 잘못 쓰기도 함. 감사, 또는 관찰사는 평양이 아닌 평안도를 책임지는 관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호조의 만성적 재정 적자 문제

그러나 늘 적자에 시달리는 나라 전체 살림을 고민해야 했던 호조는 이러한 평안도의 비축미를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보았다. 효종 때 호조판서 홍명하는 평안도의 쌀을 중앙에서 쓸 것을 건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때는 아직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평안도의 쌀을 가져다 쓸 수 없다고 하여 호조판서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평안도의 재정에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 호조는 평안도의 쌀을 활용하고

자 했다. 결국 현종 때 있었던 ‘경신 대기근’때 평안도의 쌀 5만 석을 가져다 쓰면서 평안도의 쌀은 중앙정부에서도 쓸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다. 다만 이렇게 평안도에서 쌀을 가져갔음에도 이는 원칙에서 벗어난, 부득이한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가져간 만큼 중앙 재정에서 갚아야 할 쌀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도의 쌀을 쓰면서 다른 곳에서도 원칙 일부가 무너졌다. 당시 평안도처럼 별도로 쌀을 비축해 놓은 곳이 더 있었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며 피난처로 유용한 강화도와 남한산성이었다. 이들 지역은 왕을 비롯한 조정이 옮겨갈 곳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비축미를 쓰는 것은 늘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평안도의 쌀을 쓰게 되자 강화도의 쌀도 급할 때 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조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평안도와 강화도의 비축미 양을 크게 줄였으니 이는 국방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원칙을 중요시하던 조선에서 호조, 그리고 호조판서가 이러한 판단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호조는 늘 적자 상태였다. 영조 재위 초 호조의 1년 경비, 곧 지출해야 할 비용은 쌀 10만 석, 배 1,500동, 돈 17만냥 정도였으나 실제 수입액은 쌀 6만 석, 배 700동, 돈 5만냥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만 석 이상의 쌀을 가지고 있던 평안도의 쌀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토지 조사와 세정 개혁

물론 호조는 전국적인 세금의 바탕이 될 자료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정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탁지전부고>를 통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 종류 토지의 결 수,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 쓰는 것과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규모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토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이전까지 군역이

나 공납에 해당하는 세금이 대부분 토지세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산물은 바치던 공납은 ‘대동미’로, 균역법으로 2필에서 1필로 줄어든 비용은 토지 1결당 쌀 2말을 내는 ‘결작’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쌀은 각각 선혜청과 균역청이 담당하였으니 호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세원이었다. 하지만 나라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할 토지의 면적,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이는 호조가 담당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토지 중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거나 감해줘야 하는 땅이 많았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 궁방이나 향교, 서원에 속하는 면세전, 그리고 흉년에 따라 세금을 감해주는 토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순조 때를 보면 조선 전체 토지는 140만 결 정도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가 약 40만 결, 면세가 약 20만 결, 그리고 흉년에 따라 세금을 면해주는 땅이 약 19만 결에 이르렀다. 곧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땅이라고 해야 전체 140만 결 가운데 62만 결 정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토지 정책이 세워졌다. 예를 들어 궁방 등과 협의를 통해 면세전을 줄이는 방안, 황무지가 된 농지를 개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책을 세운 것이다. 호조로서는 재원이 부족한 원인, 재원을 채울 방법을 늘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넉넉해 보인 평안도의 재정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호조판서와 평안감사의 대립과 협력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평안감사가 평안도 재정을 호조에서 쓰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는 점이다. 영조 때 평안감사인 송진명은 호조의 요구에 반발하며 호조판서가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때로는 평안감사와 호조판서의 대립이 심해 이를 왕이 나서서 정리해줘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평안감

사관 일정한 임기를 가진 자리로 호조판서와 같은 고위급 관료로서 서로 자리를 교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조판서가 되었을 때는 중앙재정의 관점에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는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조선시대 고위 관료라고 하면 정치적 탁상공론에 익숙하다면 이러한 모습은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호조로서는 호조판서를 역임한 사람이 평안감사로 가는 경우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호조와 평안감사를 모두 역임했던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정조 때 명신으로 알려진 채제공이다.

채제공은 호조판서 시절 평안도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호조 외에 다른 관청에서 평안도의 쌀을 가져다 쓰는 것은 반대하였고 평안도 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평안감사가 된 채제공은 평안도의 쌀이나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며 재정 악화와 군사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채제공 역시 정조가 당시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는 화성 축성 책임자가 되자 평안도의 재정을 활용했다.

원칙 속의 국정 운영과 나라 전체의 이익

조선 후기 호조와 평안도, 호조판서와 평안감사 사이의 줄다리기는 조금씩 호조판서 쪽이 끌고 가는 형세가 되었다. 이는 호조가 담당해야 할 중앙정부 재정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는 호조판서가 아닌 재정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못한 정부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중앙집권 국가였던 조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힘겨루기를 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또한 조선은 다양한 원칙 속에서 국정이 운영되었으니 이러한 원칙의 바탕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나라 전체의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장 김유신

삼국통일을 가능케 한 군사·물류·재정의 전략적 운용

삼국통일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김유신. 그러나 그의 업적을 단순히 뛰어난 전술과 용맹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력을 움직이는 물자와 재정,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이번 3월호에서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을 군사전략가를 넘어 군사·물류·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한 전략재정가의 시선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정경환 동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충정과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군님께서 남기신
화합과 희생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 시민 한○은 -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서언

김유신(金庾信, 595~673)은 항상 갈등관계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고대 삼국을 통일한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 역사에 각인되고 있다. 그는 이루 헤아리기 힘든 술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연승을 거듭했다. 김유신이 아니었다면 신라는 삼국통일은커녕 국가의 보존이 힘들었다는 게 역사학계의 중론이다.

김유신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저간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활동은 국가의 부름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전쟁터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언행의 근간에는 그의 삶의 철학이 있고 그의 사상이 있다. 그는 과연 어떤 삶의 철학으로 행동했는가? 그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정립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신념대로 행동했던 것이다¹.

이 글은 김유신이 과연 어떤 재정전략으로 군사력과 물류 그리고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했는지 그리고 군사·물류·재정의 전략적 운영이라는 전략재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글이다. 이러한 글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호국운동과 사상체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유신의 호국운동과 사상체계

김유신의 78년의 삶은 오직 신라라는 조국의 호국과 보국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신라는 결코 무사태평한 시대가 아니었고 말 그대로 고대식의 약육강식의 지배질서 속에 생존을 영위해야 하는 국제질서에 놓여 있었다². 쉽 없이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전쟁이 계속되었고 잠시 긴장의 끈을 놓으면 국가의 소멸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의 삶은 호국과 구국운동의 측면에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인 김구해는 금관국의 왕이었는데 법흥왕 19년 532년에 신라에 항복했다. 이후 무력(조부)-서현(부)을 거쳐 김유신은 진평왕 15년인 595년에 출생했다.

첫 번째 단계는 화랑이 되는 609년부터 시작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시절로 ‘호국의식 형성기’로 명명할 수 있다. 그가 15세 때인 609년 화랑이 되는데 이 당시 신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즉 “고구려, 백제, 말갈, 왜국이 언제나 쉬는 해 없이 신라에 침노해오던³” 상황이었다. 그는 조국이 처한 위기국면에서 호국과 보국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1. 정경환, “김유신 공부 002] 용기와 투지의 삶의 철학 :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중편을 읽고,” <https://blog.naver.com/cw3581/224207425608>(검색일: 2026년 3월 15일)
2. 정경환, 『한국정치사상사 : 고대부터 현대까지』(부산: 도서출판 이경, 2014, p.145. ‘제5장 화랑도와 통일신라의 정치사상’ 중.
3. 김범부, 『화랑의사』(대구: 이문출판사, 2011), p.34.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조국의 위기상황에서 그는 애국심으로 호국영령과 호국신께 자신의 염원을 기도했다. 611년 그의 나이 17세 때 혼자서 중악(경주 단석산) 석굴에 들어가 재계(齋戒)하고 하늘에 맹서(盟誓)하기를, “적국(敵國)이 무도(無道)하여 승냥이와 범처럼 우리의 강역을 어지럽혀 평안한 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낱 보잘 것 없는 한미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하는 뜻을 품었사오니, 하늘께서 굽어 살피시어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⁴.

이듬해에도(612년) 이웃한 외적(外賊)들이 신라를 한층 더 바짝 핍박해오자, 공은 마음에 품은 장렬한 뜻이 더욱 더 강렬해져 홀로 보검(寶劍) 들고 열박산(咽薄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기원(祈願)하기를 중악(中嶽)에서 맹서한 말과 같이 하였다⁵. 이 시기 그는 조국의 수호와 삼국통일에의 염원을 다지던 시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단계는 3-40대 청장년기로 ‘국가수호활동기’로 칭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그는 가혜성 전투, 매리포성전투, 대량성전투 등 수없는 전쟁을 몸소 진두지휘하면서 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세 번째 단계는 ‘삼국통일전쟁기’로 주로 노년기에 해당한다. 당과 연합하여 이 시기에 속적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함락하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통일국가 안정화 단계’로 통일국가 수립이후 사망할 때까지이다.

이러한 그의 가열찬 호국 및 구국운동은 자신의 사상체계인 보국헌신론, 경천천명론 및 일통삼한론 등에 의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유신의 전략재정의 힘

김유신의 삶과 구국운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단순히 군사전략가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흠어진 자원과 재원을 통합적인 국가시스템으로 일원화시킨 재정전략가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전략재정과 일반재정은 재정전략과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일반재정은 평상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이라고 하면 전략재정은 국가가 비상한 시기에 분명한 재정목표와 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다 거시적이고 총량적이고 구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분석된다.

김유신이 활동하던 당시 신라의 상황은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위기국면이었다. 그의 전략재정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첫째, ‘국가의 수호의지론’으로 칭할 수 있다. 비상한 시기

4.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 獨行入中嶽石岨, 齊校勘 戒告天盟誓曰, “敵國無道, 爲豺虎, 以擾我封場, 略無寧歲. 催校勘 是一介微臣, 不量材力, 志清禍亂, 惟天降監, 假手於我.”

5.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劍, 入咽薄山深壑之中. 燒香告天祈祝, 若在嶽誓辭

에는 비상한 대책과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소멸되면 국가에 속한 국민은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 재정도 경제도 정치도 국가가 있어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김유신은 “신이 과도한 대우를 받았고 영광스럽게도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비록 죽는다고 한들 피하지 않겠습니다.”⁶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공후사 정신이 몸에 배인 참된 애국자이다. 김유신은 비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시행하면서도 군사력, 물류체계 및 재정력이라는 세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재정을 총괄적으로 운영한 전략재정가임을 우리는 삼국통일의 과정을 통해 면밀히 알 수 있다.

둘째, ‘재정의 전략적 동원론’으로 지적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라의 전쟁상황에서 재정은 반드시 전쟁목표에 맞추어야 한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병력유지, 무기제작, 군수 물자 확보 등은 모두 국가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재정은 정부의 역할의 확대와 더불어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 및 경제안정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지만 전쟁과 같은 초비상 상황에서는 재정은 전쟁상황에 맞는 전략적 동원체제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김유신의 전략재정은 ‘국가역량의 통합적 운영론’으로 칭할 수 있다. 군사, 물류, 재정의 통합적 운영과 더불어 나라를 수호하고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보존과 수호를 위한 국가사회 내의 전 조직의 통합적 운용론이 필요하다. 비상한 시기에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가수호를 위한 재정의 일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김유신이 왕에게 “지금 저희는 한 마음 한뜻으로 생사(生死)를 같이할 수 있으니, 저 백제를 죽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⁷고 언급한 것은 바로 국민의 통합과 인화가 전략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있다.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2 김유신 중(진한 글씨는 필자의 강조내용임). 臣過叨恩遇, 忝辱重寄, 國家之事, 雖死不避.

7.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 제1 김유신 상. 今吾人一意, 可與同死生, 彼百濟者, 不足畏也.

환율 변동과 미래 경제로 읽는 불확실성 시대

“글로벌 금융변화를 이해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하다”

이 책은

금리, 경상수지,
자본 흐름으로
환율 변동의
논리를 풀어낸
재정경제
입문서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김윤래 저 | 생각비행 (2026년)

한국은행에서 실무를 쌓은 저자가 환율의 기본 원리부터 작동 메커니즘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환율 변동의 원인과 요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는 외부 충격 요인이다. 환율 상승은 해외 차입금의 원리금 부담 증가,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직결된다. 저자는 역사적 환율 위기 사례와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 강화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경제의 블록화 속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수출 경쟁력과 대외 채무 관리의 균형이 중장기 국가 재정 안정의 핵심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책이다.

공공재정 이해 핵심 포인트

- **환율 결정의 다층 요인:** 금리 차, 경상수지, 자본 흐름, 정치적 리스크 등 환율을 움직이는 다양한 변수를 이해하고 예측의 한계를 인식한다.
- **국가 재정과의 연결고리:** 환율 상승 시 외화 차입금의 원리금 부담 증가, 수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파악한다.
-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단일 국가의 환율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국 간 정책 조율과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래를 예측하는 환율전략

임경, 김윤래 지음

전면 개정판



정판 128쪽

3월은 새 회계연도의 시작이자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는 계절이다. 재정정책 및 경제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의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다. 환율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해 세계 경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두 권의 필독서를 추천한다.



『세계미래보고서 2025-2036』

박영숙, 제롬 글렌 저 | 교보문고 (2025년)

2026년부터 2036년까지 국제미래학회의 저명한 미래학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차기 10년의 경제 시나리오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 경제 환경의 거대한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미래 예측은 단기 경기 사이클을 넘어 중기(10년) 국가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산업 부상, 투자 영역, 리스크 대비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전환, 국제 무역 질서 변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들을 글로벌 맥락에서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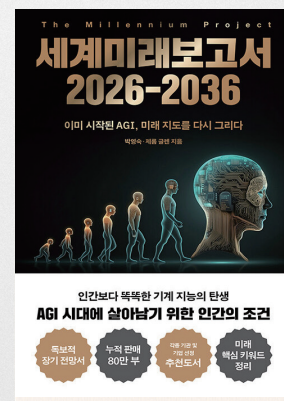
AGI 시대의 도래는 노동, 소비, 세수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체계 개편, 산업 정책 재설계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 책은

향후 10년
시와
기후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칠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다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연결 포인트

- **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 AI, 에너지 전환, 바이오 기술 등 기술 변화가 가져올 산업 지형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와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인구 구조 변화의 파급:** 선진국의 고령화, 개발도상국의 인구 보너스 종료 등 인구 트렌드 변화가 노동력, 소비, 세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대응한다.
- **지속가능성과 재정 효율성:** 탄소 중립, 원형경제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NEWS

2026 March vol. 111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련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회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지난 3월 10일(화)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첫 회의를 3월 16일(월) 서울 본원에서 개최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법 제26조의7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현장점검 지원 업무도 수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합동 현장점검 대폭 확대, 후속 조치 적정성 검증 등), ②빈틈없는 적발 제도 보강(온·오프라인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구축 등), ③e나라도움 고도화(지방정부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추진 등), ④기획예산처 지원 사항(법령 보강,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강화, 부정수급 후속 조치 거버넌스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윤석호 원장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6년 4월 재정데이터 분석·활용교육 신청 안내



교육 정보

- | 대 상 |**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
- | 집합교육 장소 |** 세종교육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87(어진동) 단국빌딩 2층 교육장)
- | 교육과정 |** ① 집합실습 과정 : ChatGPT로 쉽게 배우는 Python 데이터 분석기초 등 4과정
② 온라인 과정 : 사례로 배우는 재정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13개 과정
- | 교육비용 |** 무료
- | 신청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교육센터 교육 홈페이지(<https://edu.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상단메뉴 집합교육 ⇒ 수강희망 과목 교육신청(중복신청 가능)



▲ 교육신청 QR 코드



4월 집합 실습교육 안내

구분	일수	교육 일정	인원	장소
입문	[Python & 바이브 코딩] ChatGPT로 쉽게 배우는 Python 데이터 분석 기초	2026.4.6.(월) ~ 4.7.(화) 09:30~17:30(2일, 14시간) 모집 마감 : 4.3(금) 14:00	20명	세종 교육장 (어진동)
	재정데이터 분석기획 실무 (분석주제 선정부터 기획서 작성까지)	2026.4.6.(월) ~ 4.7.(화) 09:30~17:30(2일, 14시간) 모집 마감 : 4.3(금) 14:00	20명	
심화	바로 써먹는 재정데이터 분석·활용 실전 과정(코드 제공)	2026.4.6.(월) ~ 4.7.(화) 09:30~17:30(2일, 14시간) 모집 마감 : 4.3(금) 14:00	30명	
	재정데이터 Q-GIS 공간분석 실무	2026.4.6.(월) ~ 4.7.(화) 09:30~17:30(2일, 14시간) 모집 마감 : 4.3(금) 14:00	20명	

※ 교육 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수료 처리되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홈페이지 발급).



온라인 분석 교육

	과정명	인정 시간	수강 기간
입문	사례로 배우는 재정데이터 분석과 활용	2시간	30일
	Python을 활용한 재정데이터 분석	5시간	30일
	Brightics AI를 활용한 재정데이터 분석 입문	20시간	60일
	재정데이터로 배우는 Q-GIS 공간분석 기초	7시간	30일
	생성형 AI 리터러시: 공공분야 중심 신규	2시간	30일
	K-Culture 성공을 이끈 전략적 예산 배분 분석 신규	3시간	30일
	예산데이터 활용 방법과 사례 신규	1시간	30일
	결산데이터 활용 방법과 사례 신규	1시간	30일
	집행데이터 활용 방법과 사례 신규	1시간	30일
심화	재정데이터 사례기반 Python 분석 실습	4시간	30일
	재정데이터 사례기반 Python 분석 활용	4시간	30일
	미세먼지 위기 대응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 신규	3시간	30일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전처리 신규	7시간	30일

애독자 코너

• 2026.03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기후·산업혁신 등 국가 핵심 과제를 중
합적으로 검토하는, 정부 자문기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재정개혁위원회
- ② 중장기전략위원회
- ③ 국가정책조정위원회
- ④ 예산분석위원회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3.25. ~ 4.14.

★ 지난해 정답: ③ 열린재정

★ 지난해 퀴즈 당첨자

010-****-2494 010-****-4589
010-****-0692 010-****-8453 010-****-7333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CERAMIC FESTIVAL

ICHEON

CERAMIC FESTIVAL 40TH
ICHEON

2026. 4. 24.(금) - 5. 05.(화) 이천도시에살아온 (에스파크) · 새기마을 도예촌

흙과 불의 잔치





맞춤형 법률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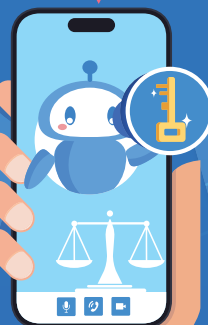
법률구조 플랫폼

One-Stop으로 만나는 법률 솔루션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지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법률 솔루션

법률 고민?
AI가
맞춤형으로
해결



3단계 이용가이드



**먼저 AI에게 법률 고민을
들어보세요!**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해결책과 기관 안내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 채널을
선택하세요.**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 중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방식을 선택



**방문하지 않고 법률구조 등
신청하세요!**

방문 없이도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전자신청

AI 콜센터

☎ **1661-3119**

법률구조 플랫폼

🌐 www.helplaw24.go.kr

